
윤석열 정부
「청년정책 추진계획」

2022. 10. 26.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I. 추진배경	1
II. 청년정책 추진 방향	3
III. 분야별 추진과제	5
1. 일자리 분야	5
2. 주거 분야	15
3. 교육 분야	21
4. 복지·생활 분야	27
5. 참여 분야	34
IV. 정책기반 구축	37
1. 공정기회 확산	37
2. 추진체계 구축	40
V. 향후 추진계획	42

I. 추진배경

1. 왜 청년정책인가 : 생애주기 이행 선제 지원 + 미래투자

- 청년은 포스트 코로나,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미래세대 주체
 - 최근 청년 삶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청년들이 성인으로의 자립·이행을 지체하거나 포기하는 사회분위기 확산
 - * 청년 구직포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(한경연): '10년 33조 → '19년 67.1조(GDP 대비 3.2%)
 - 청년이 안정적 미래를 설계하고, 삶의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국가의 선제적 지원 필요성 증대
- “청년정책”은 미래세대 주체인 청년이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의미
 - 청년에 대한 투자·지원은 생애주기 전체에 긍정적 영향 →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

2. 청년 삶 여건 : 급속한 사회·경제 변화 속 복합위기 직면

- 사회경제 급속한 변화 속에서 코로나 장기화에 이은 3高(고금리·고물가·강달러) 현상으로 청년들은 복합위기 직면
 -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, 디지털·비대면 가속화, 경력·수시 위주의 채용 트렌드 변화 등에 따라 청년 고용의 질은 여전히 열악
 - * ▲취업준비자 58만명 ▲구직단념자 21만명 ▲쉬었음 42만명 ('22년 통계청 청년층 부가조사결과)
 - 집값 상승으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줄어들고, 주거비·교육비·생활비 등으로 채무부담은 증가
 - * 연소득 평균 대비 주택가격 : '10년 5.6배 → '20년 7.3배
 - ** 29세 이하 자산 대비 부채 비율 '15년 16.8% → '21년 38.9%(전연령대 1위)
 -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빚투·영끌 및 위험자산 투자 급증, 최근 자산시장 급랭 이후 경제·심리적 어려움 직면
 - * 청년층 주식투자 중독 상담 건수 : '19년 591건 → '20년 1,047건 → '21년 1,627건

□ 지역·부모배경·고용형태 등 외부요인으로 청년 내 격차·기회불평등 확대 초래 → 계층이동의 사다리 약화

○ 출발점의 차이는 청년들의 박탈감 야기, 향후 개인역량·직업 등 더 큰 격차를 재생산하는 악순환 초래

* 상위 20% 청년, 하위 20% 대비 소득은 7.7배, 자산은 261배('21.12월, 통계청)

- 특히 '부모찬스' 논란은 청년세대의 공정 요구를 분출시킨 도화선

* 새정부 우선과제로 20대는 '복지 확대', '공정한 경쟁 및 기회보장' 선택 (KDI, '22.4월)

○ 청년 삶 여건의 지역간 격차도 심화 → 지방청년은 취업기회를 위해 수도권 이주 불가피, 반면 높은 주거비 등 어려움에 직면

* '고향서 먹고 살게 없다'...지방 떠나는 청년들('22.4.1, 언론보도)

□ 청년정책 인식·확산을 위한 추진기반 부족으로 청년이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

*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인지도(40%), 만족도(33%) 저조(경기연구원)

○ 청년들은 실질적 권한 부여와 참여 기회 보장을 요구, 정부 조직 내부에도 청년 정책 참여도를 높여야한다는 목소리 증가

3.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키워드 : 희망·공정·참여

□ 윤석열 정부는 '청년'을 정부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고, 역대정부 최초로 정부 국정과제에 청년정책 반영

* ▲(90번희망) 주거·일자리·교육 등 맞춤형 지원 ▲(91번공정) 공정한 도약기회 보장
▲(92번청년) 참여의 장 대폭 확대

□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“꿈과 희망”을 가지고 “미래세대의 주역”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추진

☞ 「**희망·공정·참여**」 3대 추진방향 下, 청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「**청년정책 추진계획**」 마련

II. 추진방향

1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기조

◇ [3대 방향] ① 희망, ② 공정, ③ 참여

- ① **(희망 복원)** 청년 맞춤형 지원정책을 통해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희망을 복원
- ② **(공정 기회)** 세대 내 격차를 해소하고 법과 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조성
- ③ **(참여 보장)** 정부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·요구를 반영하여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

◇ [분야별] 다양한 청년의 요구를 포괄하여 기회 제공과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

- ① **(일자리)**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정책 → 민관협업을 통한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
 - * 청년 고용역량 강화와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간 선순환 구조 정착
- ② **(주거)** '임대주택' 중심 → '내 집 마련' 단계까지 주거정책 확대
 - * 전월세 등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취약청년 주거복지 확대도 지속
- ③ **(교육)** 인재양성 체계를 공급자 중심 →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
 - *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청년 인재 양성
- ④ **(복지)** 저소득층 중심 지원 → 소외되는 청년없는 보다 두터운 복지
 - * 취약청년 지원과 일자리 사업간 연계 강화로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
- ⑤ **(참여)** 청년참여를 형식적으로 보장 → 권한부여 등 실질적 참여기회 확대
 - * 주요 정부부처에 청년보좌역 배치, 2030자문단 설치·운영

2 청년정책 주요내용

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.

3대 추진방향

- ❖ (희망) 청년의 “튼튼한 미래” 복원
- ❖ (공정) 청년에게 “공정한 기회” 보장
- ❖ (참여) 청년이 주도하는 “청년 정책”

5대 분야

일자리

민관협업 청년일자리지원, 맞춤형 취업서비스 혁신,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

- ① 민관협업 일경험 활성화, 디지털·신기술 분야 훈련 강화
- ②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도입, 구직단념청년 지원
- ③ 민간주도 청년창업사관학교 및 청년창업펀드 조성 확대

주 거

청년 내 집 마련 기회 확대,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

- ① 청년중심 공공분양 공급 확대, 청년 DSR·LTV 우대, 청약제도 개편
- ② 전세사기 피해 예방·지원, 공공임대주택 질적 혁신 및 공급

교 육

미래 산업 수요 대응 인재 양성, 교육비 부담 완화

- ① 민간 협업 기반의 혁신 인재 양성 및 기반 구축
- ② 학자금 대출 저금리 유지, 국가장학금 지속 지원

복 지 생 활

청년의 든든한 미래 지원, 소외됨 없는 청년 복지

- ① 청년도약계좌 신설, 병 자산형성 지원
- ②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청년 지원체계 구축, 문화누리카드 확대

참 여

청년이 만드는 청년정책, 청년으로 활기찬 지역

- ①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 설치,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확대
- ② 청년마을, 청년두레 등 청년 지역공동체 지원



청년체감 공정기회 조성

공정채용문화 확산, 공정도약기회 보장

- ① 공정채용법 추진, 채용비리신고센터 설치
- ② 청년 채무조정 강화, 부모 빚 대물림 방지

청년특화 추진체계 구축

종합적 청년정책 지원체계 확립

- ① 청년정책 통합 지원체계 구축
- ② 청년정책 연구기반 추진

Ⅲ. 분야별 추진과제

1 일자리 분야

민관협업 청년일자리지원, 맞춤형 취업서비스 혁신,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

- ◇ 민관협업 일경험 활성화 및 신산업 훈련 강화로 청년취업 지원
- ◇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
- ◇ 민간주도 청년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펀드 조성 확대

1. 민관협업 청년일자리 지원

□ 민·관 협업을 통한 청년 일경험 활성화^{고용부}

- (현황) 수시·경력 중심의 채용 트렌드 변화로 직무 관련 일경험에 대한 청년 수요가 증대*하고 있으나, 체계적인 지원 부족

* 청년이 바라는 취업서비스(중기중앙회, '21.4월): ①직무 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 확대(73.7%), ②구직활동지원금·생활비지원(59%), ③직무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(52.9%) 順

- (개선) 민관협업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, 중견·중소기업 참여 촉진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지원확대 등 일경험 활성화 추진

- 일경험 통합 DB 구축을 토대로 디지털 플랫폼을 마련하여 청년 접근성 제고 및 맞춤형 프로그램 매칭 지원* 등 지원체계 개선

* 청년 선호·실제 선택 경로 등을 반영한 직관적인 카테고리 중심 사용자 화면·경험(UI/UX), AI 기반 추천 알고리즘, 검색기능 고도화 등

	현 행	개 선
공급주체	기업 중심	경제단체, 협회, NGO 등 다양한 공급주체 활용
제공방식	대면·오프라인 방식	비대면, 온라인, 프로젝트 수행 등 새로운 방식 추가

- (계획) 청년 일경험 활성화 로드맵 발표('22년 11월) →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 단계적 확대('23년~) → 통합 플랫폼 ISP 수립('23년) 및 구축·운영('24년~)

□ **첨단산업·신기술 분야 실무인재 양성**^{고용부}

- (현황) 첨단산업·신기술 분야의 현장 인재양성을 위해 AI, 빅데이터 등 기반기술 및 핀테크, 스마트제조 등 응용기술에 대한 직업훈련 제공
- (개선)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훈련기관 확보,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훈련과정 개발·확대 등을 통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제공
 - * K-HighTech Training: 민간 혁신훈련기관, 첨단산업 분야 선도기업, 대학 등이 참여하여 AI,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·신기술 훈련과정 제공('22년: 28,521명 → '23년: 36,580명)
- (계획) 첨단산업 선도기업, 민간 협·단체 등이 주도하는 다양한 훈련과정 운영을 통한 첨단산업 인재 양성 지속('22년~)

□ **폴리텍 하이테크과정 확대 운영**^{고용부}

- (현황)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및 기업 인재 수요를 반영한 폴리텍대학 하이테크 학과 개편 및 운영
 - * 만 39세 이하의 2년제 대학 이상 졸업(예정) 또는 4년제 졸업(예정)인 실업자
- (확대) 학과 신설·개편과 연계하여 고학력 청년 대상 하이테크 과정 규모 지속 확대
 - * ('22년) 신설(AI+x 5, 저탄소분야 5), 개편(SW 5) 등 1,230명 지원 → ('23년) 신설(반도체 10, AI+x 5, 저탄소 5) 등 1,530명 지원
- (계획) '22년 15개 학과 신설·개편 → 매년 신설학과 선정 및 교육 훈련 인프라 구축 추진 등 하이테크과정 지속 확대 운영

□ **산업계 주도형 청년 맞춤형 훈련 지원 강화**^{고용부}

- (현황) 산업별 협·단체가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을 청년(구직자·재직자 등)에게 제공하여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
- (개선) 산업분야 융·복합 과정 확대*, 프로젝트 및 실습 등 현장 특화 훈련과정 활성화**, 청년 참여 비율 상향 조정***

- * (현행) 사물인터넷, 빅데이터, SW, 3D프린터, 드론 등 5개 분야 → (확대) 친환경자동차
- ** (현행) 용접마스터 기술자 양성과정 등 32개 과정 → (개선) 3D프린터 운용실무 양성 과정 등 36개 과정
- *** (현행) 재직자 40%, 채용예정자 70% 이상 → (개선) 재직자 50%, 채용예정자 70% 이상

- (계획) 융·복합 과정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컨설팅 실시('22년) → 제도개선 및 복수 사업단 협업 융·복합 과정 확산('23년~)

□ 벤처기업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'청년 기술평가체험단' 운영^{중기부}

- (현황) 청년 구직자의 직무체험 기회 제공 및 중소·벤처기업 일자리 인식 개선을 위해, 청년 기술평가체험단(이하 체험단)을 운영중 ('18.6~)
- (개선) 청년층 선호업종 영위기업, 기술력 우수 벤처기업 위주의 기술평가 체험을 운영하여 일자리 관심도 및 체험 만족도 제고
- (계획) 매년 체험단 공모·선발(6월) → 벤처기업현장탐방(7~9월) → 우수자 포상(10월)

□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 및 스타트업 취업 연계 확대^{중기부}

- (현황)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벤처스타트업의 인공지능 기술 인력 수요가 급증하여 우수 인재 채용에 애로 발생*
- * 개발자 인력부족 규모(SW정책연구소) : ('20년) 4,967명 → ('21년) 9,453명 → ('22년) 14,514명
- (확대) 벤처스타트업의 현장 개발인력난 해소와 인공지능 청년인재 육성을 위해 비대면 교육과정 확대 및 취업 연계 원스톱 지원
- * 이어드림 스쿨: AI 관련 기초이론부터 실전형 실습까지 교육과정 운영
규모 : ('22년) 200명 → ('23년) 200명
- (계획) 비대면 과정 시범도입('22년) 및 정식 운영('23년) → 비대면 교육과정 단계적 확대('24년~)

□ 공공기관 청년 체험형 일자리 지원^{기재부}

- (현황) 청년 직무체험 기회 제공 등을 위해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중
 - * 공공기관 인턴으로 채용하여 2~3개월 근무하면서 기관내 직무교육, 멘토링 제도 등을 통해 취업역량 배양, 성적 우수자 등에 대해 정규직 채용 시 우대
- (개선) 체험형 청년인턴 주기별 소통강화 등을 통해 사업 내실화
 - * 청년인턴 참여 희망 청년/ 참여중 청년/ 참여종료 청년 등 주기별 소통 강화
- (계획) 매년 1월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개최 및 내실화 추진(상시)

□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장려금 지원^{고용부}

- (현황) 청년고용상황이 최근 개선되고 있으나,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지원에 대한 요구도 지속
- (개선) 청년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신규 채용기업에 장려금 및 고용유지 인센티브 제공
 - * (요건)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
 - * ('22년) 1년 최대 960만원 → ('23년) 2년 최대 1,200만원
- (계획)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기관 공모(~'22년) → '23년 시행

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개선^{행안부}

- (현황)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 일자리 사업*을 통해 지역 청년고용을 창출 중이나, 지역과 청년의 상생발전 강화를 위해 사업효과성 제고 필요
 - * 지역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고,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을 잘 아는 지자체가 지역에 적합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설계·운영하도록 지원
- (개선) 청년 선호도 고려한 사업장 선발 및 청년 애로사항 점검 강화를 통해 일자리 질적 제고 및 중도 포기자 감소 유도
 - * 성과분석을 통해 환류체계를 마련하고, 고용유지율 등 전략적 성과관리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
 - ** 지원 규모 : ('22년) 2,388억원(26천명) → ('23년) 1,986억원(21천명)
- (계획) 분기별 컨설팅·현장점검, 우수사례 공모(하반기) 등 사업 내실화 추진

□ 지역기업-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^{산업부}

- (현황) 지역 내 우수기업 발굴·소개를 통해 지역기업 인식개선 및 지역기업-청년 간 취업연계 지원 중
- (개선) 기업탐방 후 취업과 연계되도록 취업 특화프로그램 보완 및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지역의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 강화
 - * 기존 대학생으로만 구성되었던 희망이음 서포터즈에 특성화고, 출향청년을 신규로 포함하여 각 청년들 니즈에 맞는 타겟 홍보
- (계획) 권역별 맞춤형 지역기업 탐방, 출향청년 지역U턴 프로그램, 희망이음 취업캠프(11월) 등 운영으로 지역기업과 청년 연계 강화('22년~)

□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^{기재부}

- (현황) 청년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통한 민간의 청년고용 촉진 필요
 - * 15~29세 청년 고용 시 우대 공제를 적용하여 추가 공제액 및 공제율 제공
- (개정) 「통합고용세액공제」 신설(조특법 제29조의8)을 통해 실효성 제고* 및 청년고용시 우대 공제액 상향**, 청년 연령범위 확대(15~34세)
 - * 고용증대·사회보험료·정규직전환자 세액공제 등 5개 유사 고용지원제도 통합
 - ** 청년고용시 중소기업 공제액 상향(만원): ▲수도권 1,100 → 1,450, ▲지방 1,200 → 1,550
- (계획)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(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, ~'22년) → 동법 시행령 개정(청년 연령범위 확대, '23년 1분기)

□ 청년고용 등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우대^{국세청}

- (현행) 청년고용 등 일자리 창출*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조사 선정 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우대 제도 실시 중
 - * 수입금액 5백억원 미만 2%, 5백억원~15백억원 미만 3% 이상 고용 창출
- (지속) 청년고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우대 제도 지속 실시
 - 청년 고용·청년 창업으로 고용인원 증가 시 가중치(1명을 2명으로 인정) 부여하여 정기조사 선정 시 우대 강화

구 분	현 행
청년* 고용	청년 고용 증가시 가중치 부여
청년 창업(청년 강소 포함)	청년 창업·청년 강소기업의 고용인원 증가시 청년여부 관계없이 동일하게 가중치 부여

* 청년 : 15세~34세이하(군복무기간 최대6년 가산)

- (계획) 일자리창출 계획서 접수(매년 11월) → 정기조사 선정 제외
우대(매년 12월~차년도 1월)

2. 맞춤형 취업서비스 혁신

□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도입^{고용부}

- (현황) 대학 진학률이 OECD 최고수준인 가운데, 학교-노동시장
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취업지연 청년 규모는 증가 추세
- (신규) 재학단계부터 직업탐색에서 취업까지 청년역량을 제고하는 맞춤형
고용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
- 청년들에게 익숙한 온라인 방식으로 개인별 관리, 대학일자리
플러스센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

* (저학년) 진로에 대한 관심 조기 제고 및 직업탐색 역량 개발 위한 프로그램 제공 → 직업 포트폴리오 설계
(고학년) 취업역량진단 이에 기반한 취업활동계획 수립 → 맞춤형 직업훈련·일경험 등 제공

□ 구직단념 청년[니트] 구직의욕 고취 청년도전 지원사업 확대^{고용부}

- (현황)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구직
단념 청년(니트*)에 대한 지원 필요성 증가
- * 니트: NEET(Not in Education, Employment or Training)
- (확대)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구직단념 청년 적극 발굴,
구직의욕 고취를 위해 특화프로그램 신설* 및 지원수준 확대**

* (현행) 단기프로그램(1~2개월) → (개선) 중장기 특화프로그램(5개월) 신설

** (현행) 수료시 20만원 지원 → (개선) 참여수당·인센티브 등 최대 300만원 지원

- (계획) 중·장기 특화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→ 지원 확대 시행
지침(프로그램 신설 및 지원확대) 마련 및 시행('23년~)

□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^{고용부}

- (현황)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취약 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,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
- (개선) 청년의 안정적 구직활동 및 조속한 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및 소득 인정수준 확대 등 지속 개선*
 - * ① 구축수당 4회차 지급 전에 취업한 경우 잔여 구축촉진수당의 50% 지원 추진
 - ② 구축수당 수급 중 약 55만원 이상 소득 발생시 수당 지급 정지 → 소득에 따라 수당 감액
- (계획) 「구직자취업촉진법」 개정 및 제도 개편(~'23년)

3.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

□ 민간 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^{중기부}

- (현황) 청년창업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가 부족한 민간투자 연계 및 교육(IR 실전 피칭 등) 기능 보완 필요
- (개선)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 운영사가 지역거점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권(선발, 교육 등) 가지고 기업육성·투자유치 등 지원
- (계획)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단계적 확대 추진
 - * ('22년) 1개소 시범도입 → ('23년) 2개소 추가(총 3개소)

□ 모태펀드를 통한 청년창업펀드 추가 조성^{중기부}

- (현황) 모태펀드는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민간 벤처 펀드에 출자하여 1.7조원 규모 청년창업펀드 既 조성('13~)
- (확대) '23년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청년창업펀드를 추가 조성*하여 청년 창업기업에 집중 투자
 - * ('22년) 500억원 출자/1,100억원 조성 → ('23년) 330억원 출자/550억원 조성(정부안 기준)
- (계획) '23년 모태펀드 운용지침 수립(~'22년) → '23년 모태펀드 운용 계획 수립 및 출자사업 공고(~'23.1분기) → 자펀드 선정 및 결성('23년)

□ 청년기업 특화 펀드 조성^{과기정통부}

- (현황) KIF(Korea IT Fund)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지원을 위한 400억원 규모 청년기업 특화 펀드 조성('22)
 - * KIF가 160억원(80억×2개)을 출자하여 400억원 이상(200억×2개) 펀드 결성
- (지속)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펀드 조성 지속 추진
- (계획) 청년창업기업 투자 지원 및 개선사항 발굴 지속(수시)

□ 청년 창업기업 보증지원 확대^{중기부}

- (현황) 참신한 기술력을 가진 청년창업가의 창업 성공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창업기업 대상 우대 보증제도 운용*('11.9월~)
 - * 기술평가모형 : 청년 창업기업 전용 평가모형 적용
 - ** 지원한도/보증비율/보증료/산정특례 : 3억원 / 95% / 0.3%(고정) / 1억원
- (확대) '26년까지 청년창업기업에 총 2조원(연간 4천억원) 신규보증, 우수 기업을 위한 '청년 테크스타보증' 지원 대상·규모 확대*
 - * 대상 : 정부 추천기업 → 민간 창업 유관기관 추천기업까지 확대,
지원한도/보증비율/보증료/산정특례 : 6억원 / 100% / 0.3%(고정) / 2억원
- (계획) 매년 4천억원 규모 신규보증 공급 지속

□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 사업 강화^{중기부}

- (현황) 30대 미만 청년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他 연령 대비 낮아*, 청년층의 창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필요
 - * 창업기업 5년차 생존율 : △30대 미만 21.4% △30대 30.5% △전체 32.1%
- (개선) 만 29세 이하 생애 최초 창업자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교육, 사업화자금, 멘토강화 및 팀빌딩 지원 등을 통한 성공사례 창출
 - * ('23년) 7,860백만원 (120팀×65.5백만원) 지원
- (계획) 사업 기본계획 수립('22년) → 지원사업 수행('23년) → 성과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(연중)

□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 구축^{교육부}

- (현황) 대학을 창업교육의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교육, 기술창업, 사업화 등을 지원*하고 있으나 추가 지원 필요

* 창업교육 거점대학,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, 대학창업펀드, 학생창업팀 등

- (개선) 창업 교육 거점대학* 및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** 확대·개편을 통해 대학을 지역 창업교육의 허브(HUB)로 육성

* 지원규모 : ('22년) 2개권역(일반2), 560백만원 → ('23년) 5개권역(일반5, 전문3), 5,198백만원

** (현행) 개별 대학 중심 지원 → (개선) 대학 컨소시엄(주관大+참여大) 지원

- 유망 학생창업팀 육성·지원 및 대학창업펀드* 투자 등을 통해 학생들이 부담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계획

* '22년 5개 운용사(대학기술지주회사 등)를 선정하여 191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

- (계획)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 수립('22.하~) → 창업교육 거점대학 및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지원('23년~)

□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거점 대학 역할 강화^{중기부}

- (현황)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'창업중심대학'으로 지정하여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창업의 허브로 육성 중

* 지정현황('22년, 6개) : 강원대, 대구대, 부산대, 전북대, 한양대, 호서대

- (확대) 창업중심대학 추가 선정 및 지역·대학발 창업기업 지원 확대, 대학 내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활성화(교육부 협업) 추진

* ('22년) 6개 대학(510개사), 459억원 → ('23년) 9개 대학(750개사), 674억원

** 창업중심대학 선정평가에 창업휴학제, 창업연계전공제 활용실적 등을 반영

- (계획) 창업중심대학 추가 모집공고('22.12~) → 창업중심대학 사업화 지원기업 선정(~'23.상) → 사업화자금 지원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

□ 청년 리딩그룹 1천명 프로젝트 추진^{과기정통부}

- (현황) 데이터·AI 바우처 등을 지원하여 청년 소상공인의 데이터 구매·활용 및 비즈니스 적용을 통한 혁신사례 창출 지원('22~)

- (지속) 데이터·AI 바우처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청년 기업* 우대
* 대표자 중 1인이 사업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기업
- (계획) 데이터·AI 기반의 혁신서비스 개발에 도전하는 청년기업 발굴('23)

□ 국토교통 신산업 스타트업 성장 지원^{국토부}

- (현황) 창업기획 프로그램* 운영(KAIA), 한국모태펀드(중기부)에 1,200억원 정부출자** 등 국토교통 스타트업*** 창업·투자 지원
* 기업진단, 멘토링, IR피칭, 투자연계 등(참여기업 수 : '21년 6개, '22년 10개)
** 민간투자금과 매칭하여 10개 자펀드 조성, 47개 국토교통 스타트업에 투자 중('22.7)
*** 프롭테크, 스마트시티, 스마트건설, 스마트물류, 녹색건축 등
- (확대) 창업기획 프로그램 참여기업 확대('22년 10개 → '23년 12개), 한국모태펀드에 '23년 150억원 추가 출자
- (계획) 국토교통 혁신펀드 및 창업프로그램 지속 운영

□ 민·관 합동 「디지털 분야」 디지털 청년기업 발굴대회 개최^{과기정통부}

- (현황) 디지털 분야 경진대회*를 운영 중이나, AI·반도체·메타버스 등 기술 분야별(11개)로 소규모·개별적으로 운영되고, 민간과도 연계 부족
* 인공지능 온라인 경진대회, AI 반도체 설계 경진대회,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등
- (확대) 경진대회 우승자 + 민간 디지털 청년기업 지원 프로그램 우승자가 참가하는 왕중왕 경진대회 개최
- 경진대회 수상자에게 멘토링, 엑셀러레이팅, 해외진출 등 과기정통부·민간 창업·벤처 사업(차년도) 집중지원
- (계획) 제1회 경진대회 개최('22) → 경진대회 규모 확대('23~)

□ 캠퍼스를 활용한 창업부지 조성^{국토부}

- (현황) 지방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창업 공간 제공 추진(현재 7개 대학 선정 완료)
- (확대) 지방대학이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규대학 선정('23년~) 등 사업 확대 추진

- (계획)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, 매년 공모·선정, 산학협력·기업지원 등 창업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 추진(중기부,교육부 협업)

□ 농·어촌 지역 취·창업 지원^{관계부처}

- (현황) 농·어촌 지역에 취·창업하는 청년 농·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여 취·창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강화 필요
- (확대) 청년 영농·어촌 정착지원금* 확대, 맞춤형 농지**·어선*** 지원 등

* (농업) 지원규모: ('22년) 2,000명 → ('23년) 4,000명

(어촌) 지원규모: ('22년) 200명 → ('23년) 231명

** 청년 공급 가능 농지 확보, 농업 스타트업 단지 신규 조성 및 선임대-후매도 방식 도입

*** 지원규모: ('23년) 10명, 450백만원

2 주거 분야

청년 내 집 마련 기회 확대,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

- ◇ 청년중심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등 청년 내 집 마련 지원
- ◇ 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, 전세사기 대응 등 주거사다리 복원

1. 내집 마련 기회확대

□ 청년중심 공공분양 공급 확대^{국토부}

- (현황) 청년 대상 공공분양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특화주택(신혼희망타운) 등 신혼부부 중심 공급으로 미혼청년은 분양 혜택 소외
- (신규) 신혼뿐 아니라, 청년·생애최초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역세권·신도시 등 우수입지에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
- (계획) 정책성과를 조기화할 수 있도록 연내 사전청약 추진(22.12~)

□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완화^{금융위}

- (현황) 주택 소재지역·주택가격에 따라 LTV 차등 적용(60~70%) 및 총 대출한도 4억원 제한에 따른 내집 마련 기회 제약

* ▲(투기과열지구) 50~60%(주택가격 9억원 이하), ▲(조정대상지역) 60~70%(주택가격 8억원 이하)

- (신규) 소득, 주택 가격, 지역과 상관없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을 완화(60~70%→80%)하고 총 대출한도 확대(4→6억원)

* 원활한 LTV 80% 대출을 위해 모기지보험(차주의 주담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대출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상품) 활성화 유도

** '21년말 기준 수도권 APT 중위가격 7.7억원 → LTV 80% 적용시 6.2억원

구 분	현행		개선
LTV	투기과열지구	50~60%	80%
	조정대상지역	60~70%	
대출한도	4억원		6억원

- (계획)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 중('22.8월~)

□ DSR 산정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 확대^{금융위}

- (현황) DSR 산정시 대출시점 및 만기시점 소득 간 단순 평균으로 장래소득 계산 → 현재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상환능력 과소평가

- (신규) 대출시~만기시점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장래소득을 계산하여 청년층 상환능력 실질적 평가 및 대출폭 확대

* (현행) 만기를 최대 20년으로 제한 → (개선) 장래소득 산정시 ①20년(현행 최대만기) 또는 ②실제만기(예:30년) 중 차주에게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

연령	예상소득 증가율	
	현행	개선
만 20~24세	38.1%(20년 만기)	51.6%(30년 만기)
만 30~34세	12%(20년 만기)	17.7%(20년 만기)

- (계획) 5개 금융업권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시행 중('22.9월~)

□ 50년 만기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^{금융위}

- (현황) '21.7월 청년·신혼가구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였으나 금융지원 강화 필요
 - * '22년 9월말 기준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약 18.9%가 40년 만기 선택
- (신규) 청년·신혼부부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초장기 정책모기지 만기를 기존 40년 → 50년으로 확대('22.8.1시행)
 - * ▲(이용대상)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(결혼예정자 포함)
 - ▲(상환방식) 원금균등·원리금균등상환(체증식 제외)

〈 초장기 정책모기지 요건 비교 〉

구 분	만기 30년 이하	초 장 기	
		만기 40년	만기 50년
이용대상	민법상 성년	만 39세 이하, 신혼가구	만 34세 이하, 신혼가구
상환방식	원(리)금균등, 체증식	(좌 등)	원(리)금균등

- (계획)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을 통해 현재 시행 중('22년 8월~)

□ 일반공급 추첨제 등 청년 친화형 청약제도 개편^{국토부}

- (현황) 기존 청약제도는 일반공급(85㎡이하)에 대한 가점제* 적용 등으로 미혼청년은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가능성 희박
 - * 무주택기간, 부양가족수,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가점이 높은 순으로 주택공급
- (개선)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 중형평형(85㎡) 이하에 추첨제 비율을 확대
- (계획)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을 통한 개선안 마련('22) → 과제 제도개선 검토 및 필요시 공급규칙 개정 지속

□ 저소득 청년층 대상 안심전환대출 추가 우대^{금융위}

- (현황) 금리상승세 지속으로 청년 등 서민·실수요자의 원금·이자상환 부담 경감 지원 및 향후 추가적인 금리상승 위험 완화 필요
- (신규) 변동금리 주담대를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 대출 출시 → 저소득 청년층*은 우대금리를 10bp 추가(총 55bp 우대**)
 - *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
 - ** 현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55bp 우대하여 3.7~3.9%대 금리로 대출이용 가능
- (계획) '22.9월부터 접수 중

2. 주거비 부담완화

□ 청년·신혼 대상 주택구입·전세대출 확대^{국토부}

- (현황) 청년·신혼부부에게 저금리*로 구입(디딤돌)·전세(버팀목) 대출을 지원 중이나, 최근 주택·전세가격 상승으로 대출 한도 현실화 필요

* 주택구입대출(디딤돌) 금리 : (신혼부부) 1.85~2.70%, (생애최초) 1.95~2.80%
전세대출(버팀목) 금리 : (신혼부부) 1.20~2.10%, (청년) 1.50~2.10%

- (개선)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('22.下)을 통해 청년·신혼 대상 구입(디딤돌)·전세(버팀목) 대출 한도 확대(^{전세}22.10~, ^{구입}23.1~)

< 대출한도 확대(안) >

구분	신혼부부		생애최초		청년	
	현재	확대	현재	확대	현재	확대
구입자금 (디딤돌)	2.7억	4억	1.5억	2억	(해당 없음)	
전세자금 (버팀목)	2억(수도권) 1.6억(지방)	3억(수도권) 2억(지방)	(해당 없음)		0.7억	2억

* '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발표'(7.20)

- (계획)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전세(버팀목) 대출한도 확대('22년 10월~)
→ 구입(디딤돌) 대출한도 확대('23년~)

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확대^{국토부}

- (현황) 부모로부터 독립한 20대 저소득 청년*에게 부모와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 중이나 지원수준 현실화 필요

* 주거급여 수급가구(기준중위소득의 46%이하) 대상

- (확대) '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47%까지 확대하고, 시장임차료를 반영하여 지급상한도 현실화*

* (예시) 서울 1인 청년 기준 월 최대 32.7만원('22년) → 33만원 지원('23년)

- (계획)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('23년 47%)

□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^{국토부}

- (현황)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된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지원 필요
- (신규) 주거급여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한 월세지원 신규 추진

- ▶ (대상·내용) 저소득* 독립 청년(19~34세/약 15.2만명)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원
*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&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- ▶ (사업기간) '22~'24년 한시사업(신청 : '22.8~'23.8 / 지급 : '22년~'24년)
- ▶ (신청방법) (온라인) 복지포털(www.bokjiro.go.kr) (오프라인)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·군·구청

- (계획) 8월부터 온·오프라인으로 신청·접수 → 소득·재산조사 등을 거쳐 11월부터 지급 개시(최대 12개월간 지원)

□ 대학 기숙사 리모델링·개축 및 연합기숙사 확충^{교육부}

- (현황) 기숙사 수용률이 낮고, 노후된 기숙사가 많아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 지속 발생
* ▲전국 대학 기숙사 수용율 : 23.0% ▲30년 이상 노후 국립대 기숙사 현황(21.4. 기준) : 25%
- (확대)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내 노후 기숙사 리모델링 및 캠퍼스 밖 연합 행복기숙사 확충
※ ('23년) 대학 기숙사 확충 사업 6건 추진
- (계획) 기숙사 확충 사업 지속 추진

□ 귀농·귀촌인 등 농촌 청년 주거 지원 확대^{농식품부}

- (현황) 귀농·귀촌인 등 농촌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 유도 및 주거 부담 완화 위해 「청년 농촌보급자리」 사업을 진행중이나 여전히 주거여건 열악
- (확대) 농촌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등 주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청년 농촌보급자리 확대 조성
*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·경제기반이 갖추어진 지역이나 교육·문화·여가 등의 인프라와 가까운 지역(마을)을 연계하여 조성
- (계획) 청년 농촌보급자리 지구 확대 * (~'22) 5개소 → ('23년) 9개소

3. 주거품질 및 주거안정 강화

□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^{국토부}

- (현황) 전세금반환보증 미가입, 임차인 거래 정보 부족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 증가*, 특히 청년은 정보·경험 부족으로 피해 집중
 - * (피해액, 억원) ('18) 792 → ('19) 3,442 → ('20) 4,682 → ('21) 5,790 → ('22.6) 3,407
- (개선)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활성화를 위해 보증료 할인(50% → 60%) 및 가입채널 확대(모바일),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*
 - * 주택도시보증법 개정안(김상훈, '21.9),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(소병훈, '21.5) 국토위 계류중
- 법률상담 알선, 긴급 금융·주거지원 서비스 매칭 등 조속한 구제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피해 예방·지원센터 설치(9월)
- (계획) 보증가입 활성화 및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공개 추진('23년)

□ 공공임대주택 질적 혁신 및 지속 공급^{국토부}

- (현황)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기반*은 확보하였으나, 청년 눈높이에 맞도록 입지·평형·주거서비스 등 질적 측면에 대한 개선 필요
 - *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% 수준(OECD 평균) 달성
- (개선) 도심 등 우수입지 공급, 평형 확대, 분양주택 수준의 마감재 품질 향상, 청년·신혼 특화서비스 결합 등 공공임대주택 질적 혁신
 - * 공공임대 질적 혁신방안은 '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(8월)을 통해 기 발표
- (계획) '23~'27년 공공임대 공급계획 수립('22.12월)

3 교육 분야

미래 산업 수요 대응 인재 양성, 교육비 부담 완화

- ◇ 신산업·신기술 수요에 대응한 미래 혁신 인재 양성
- ◇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완화

1. 미래 산업 수요 대응 혁신 인재 양성

가. 민간 협업 기반의 혁신 인재 양성

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확대^{교육부}

- (현황) 첨단(신기술) 분야의 중급(학사) 인력 중심으로 양성하고 있으나, 반도체 분야 등에 대한 고급 인력 수요 증가
 - * '배터리 분야 배출되는 인원은 1년에 겨우 150명 수준, 실제로 필요한 건 1년에 석·박사급 650명 정도" ('22.5.12., 언론보도)
- (확대) 기존 학부 중심 운영에서 석·박사 과정까지 확대·개편하고,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학과 지원 강화
 - * 지원규모: ('22년) 8개교, 9,600백만원 → ('23년) 11개교, 17,100백만원
- (계획) 석박사 과정 확대 개편안 마련('23년 상반기) → 확대 운영
 - * ('22년) 8개교(학사) → ('23년) 11개교(학사+석·박사)

□ 첨단산업 인재양성 집중 교육과정 제공(부트 캠프)^{교육부}

- (현황) 첨단산업 분야 직무 역량개발을 위한 집중교육과정 필요
- (신규) 대학+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대학 내 첨단분야 단기 집중육성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고, 이수학생에게 마이크로 디그리(소규모 학위) 부여
 - * (예시) 하루 8시간 × 주 5회 × 16주 과정
 - ** 지원규모: ('23년, 신규) 15,000백만원(10교 × 1,500백만원), 반도체 분야 시범운영
- (계획) 정책연구 추진(~'22) → 기본계획 수립 및 대학 선정('23~)

□ **직업계고 신기술 훈련지원 확대**^{고용부}

- (현황) 4차산업혁명 등 신기술분야 인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계고 학생 대상 신기술분야 직무능력 향상 지원 필요
- (강화) 민간 전문훈련기관의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 습득하기 어려운 신기술분야 훈련을 지원 → 지원 대상 확대 및 강화*로 직업계고 신기술 분야 직무능력 향상

* ▲지원학과 확대: 40개 학과 → 55개 학과, ▲지원기간 연장: 3년 → 5년

- (계획) 신규학과 추가 선정을 통한 지원학과 확대

□ **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**^{교육부}

- (현황) SW·AI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수요가 높으나, 현장실습을 미운영하는 기업이 많아 취업 기회가 부족

* 직업계고 학생 대상 현장실습은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중

- (확대) 기업수요와 연계하여 현장교육, 취업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단기 교육과정(3개월 내외)의 신기술분야 확대*

* 반도체 관련 전자부품 분석, 전자회로 활용 등 기술 교육 인원 확대('22년, 70명→'23년, 540명)

** 지원규모: ('22년) 2,783백만원(1,050명) → ('23년) 4,265백만원(1,350명)

- (계획) '23년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계획 수립('22.12월) → 교육과정 개발 및 학생 모집·선발('23.상) → 반도체·신산업 분야 등 직무교육과정 운영('23.하)

□ **‘진로-교육-취업연계 지원’ 원스톱 프로젝트(WE-Meet)**^{교육부}

- (현황) 산업구조 변화 및 기업 채용트렌드 전환(정규공채→수시채용)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직무 경험 제공 중요성 강조

- (확대)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는 ‘진로-교육-취업연계’ 원스톱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학 중 일 경험을 통한 직무역량 제고 지원 확대

* 지원규모: ('22년) 5개 컨소시엄 → ('23년) 13개 컨소시엄(예정)

- (계획) 시범운영('22년) → 운영결과를 토대로 프로젝트 확대 운영('23년~)

* ('22년) 5개 컨소시엄 → ('23년) 13개 컨소시엄(예정)

□ 4차 산업 맞춤형 단기 직무과정 확대(매치업:Match業)^{교육부}

- (현황) 4차 산업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대학생, 구직자, 재직자 등을 위한 산업 맞춤 단기직무 인증과정 운영
 - (확대) 첨단지식을 갖춘 현장 실무인재 양성 위한 매치업(Match業) 프로그램 확대 운영
 - 최근 신기술분야를 추가하고 핵심직무 반영한 프로젝트 중심의 온·오프라인 교육과정** 신규 도입
- * (분야) (현행)메타버스·스마트팜·DNA·5G 등 12개 분야 → (개선)신기술 분야 추가
- ** (방식) (현행)기초과정(지식·이론 중심 온라인) → (개선)심화과정(실습 등 온·오프라인) 추가
- (계획) 기본계획 수립('23년) → 신산업·신기술 분야 신규 선정·개발('23~'25)

나.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 기반 구축

□ 신산업 분야 혁신인재 양성 지원(부처 협업형 인재양성)^{교육부}

- (현황) 신산업 분야 인재수요에 따라,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부처와 협업하여 대학의 혁신인재 양성 지원
 - 대학생들이 신기술 역량을 습득, 전문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산업 특화 교육과정 운영 및 산학연계·취업 활동 지원
- * 반도체·미래자동차 등 14개 신산업분야, 7개 부처 참여
- (확대) 각 부처의 신산업 인재 양성 수요를 토대로 지원규모 및 인재 양성 목표 지속 확대 추진
- * 지원규모 : ('22년) 14개 세부사업, 42,000백만원 → ('23년) 16개 세부사업, 105,284백만원
- ** 인재양성 목표 : ('22년) 4,295명 → ('23년) 7,560명
- (계획) 14개 세부사업 추진('22) → 16개 세부사업 추진('23) → 성과분석을 통한 지원분야 조정 및 지원확대 추진('24~)
- * 대학혁신지원사업('22~'24년) : ▲(1유형) 일반재정지원 ▲(2유형) 부처협업형 인재양성사업

□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 대학^{교육부}

- (현황) 수도권-지방 대학 간 교육자원을 공동활용하는 협력체계 구축 및 신기술 분야별* 산업·연구계 수요 기반 교육과정 개발·운영 中
 - * ①인공지능, ②빅데이터, ③차세대반도체, ④미래자동차, ⑤바이오헬스, ⑥실감미디어, ⑦지능형 로봇, ⑧에너지신산업
- (확대) 반도체 등 첨단분야 컨소시엄 추가 선정 및 지원
 - * 지원규모: ('22년) 8개 컨소시엄, 89,010백만원 → ('23년) 13개 컨소시엄, 144,300백만원
- (계획) 8개 컨소시엄(~'22) → 13개 컨소시엄('23~)

□ 전문대학 활용 신산업 및 지역 특화 인재 양성^{교육부}

- (현황) 전문대학을 활용한 신산업분야 인재 양성 기반 구축 및 지역 연계 인재 양성 체계 마련 필요
- (확대) 마이스터대* 및 신산업분야에 특화된 선도전문대학 육성 확대, 지역특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** 사업 지속 추진
 - * 고숙련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단기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운영
 - ** 기초지자체와 전문대학이 자원과 역량을 지역 수요에 맞게 활용하여 지역특화 인재 양성
- (계획)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확대·고도화* 추진('23~)
 - * (마이스터대) '22. 5교(컨소시엄 제외)→'23. 6교
(신산업특화선도전문대학) '22. 12교, 120억→ '23. 14교, 140억(차세대 반도체분야 2교 확대)
(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) 2주기 사업 기본계획 수립(25년 상반기)

□ 직업계고 학과 개편^{교육부}

- (현황) 학생들이 미래 신산업 분야에 대응·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역량 교육 필요
- (개선)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·역량과 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직업계고 학과, 교육과정 등 재구조화 지원
 - * ('23년)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사업을 고도화하여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중점 지원 추진
- (계획) '22년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지원사업 정례협의회를 통한 '23년 추진방향 논의('22.하) → 신산업 분야 중점 지원 추진('23년~)

□ 분야별 인재 양성 주요 대책^{관계부처}

- (현황) 미래 신산업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청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인프라 등 지원

<분야별 주요 인재양성 방안>

분야	주요 내용
소프트웨어 (과기정통부)	○ (이노베이션 아카데미) 자기주도적 혁신 SW교육(無강사, 無학비, 無교재)을 통한 연 600명 수준 인재 양성 ○ (기업멤버십 SW캠프) 기업이 교육생 선발 및 교육과정 설계·운영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현장 맞춤형 중·고급 인재 양성 * '23년 예산: 124억 원, '23년 목표: 600명 양성 ○ (장병 SW·AI 역량강화) 병사 및 전역 예정 단기복무 간부에게 맞춤형 온라인 AI·SW교육을 제공하여 역량 향상 기회 제공 * '23년 예산: 36억 원, '23년 목표: 3,867명 양성
첨단 디지털 (과기정통부)	○ 대학 내 AI, 반도체, 5G.6G 등 첨단 연구 프로젝트*를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강화 및 석·박사 연구 인재양성 확대 * 차세대통신, 양자, 블록체인, 사이버보안, 사물인터넷, 지능형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* 지원규모 확대: ('22년) 48개 대학ICT연구센터 → ('23년) 52개 센터 → ('27년) 80개 규모 목표 ○ 국내 석·박사생 대상 해외 우수 대학 연계 첨단분야 단기교육 과정 확대* 및 학부생 해외기업 인턴십** 지속 추진 * 해외 대학(예: 美 카네기멜론대, 加 토론토대 등) 연계 첨단분야 교육 : '22년 30명 → '23년 60명('23~27년 누적 300명) ** 해외기업 인턴십 규모 : '22년 20명 → '23년 20명('23~27년 누적 100명)
미래에너지 (산업부)	○ 미래 에너지산업(재생에너지, 수소·연료전지 등)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석·박사 중심의 인재 양성 - 산·학 공동 프로젝트 및 기업 채용연계를 통해 일경험 기회 확대 및 신기술 분야 특화 교육과정 강화 * '23년 예산: 50,425백만원, '23년 목표: 수혜인원 1,919명
콘텐츠·미디어 (문체부, 과기정통부)	○ (메타버스) 메타버스 아카데미 운영* 및 콘텐츠 교육기관 지원** * '23년 예산 : 75억원, '23년 목표 : 메타버스 개발자·창작자 300명 양성 ** '23년 신규 : 1,500백만원 (50명 × 30백만원)_문체부사업으로 추정됨 ○ (웹툰) 웹툰융합센터 내 전문 교육공간 마련 및 신진 웹툰 작가 대상 집중육성 교육과정 개발·운영 * ('23년 신규) 1,000백만원(20명 × 5,000천원) ○ (게임) 게임인재원(2년 과정)을 통해 산업 트렌드에 적합한 전문인력 육성 * ('22년) 3,958백만원 (130명 × 30.4백만원) → ('23년) 4,958백만원 (185명 × 26.8백만원) ○ (디지털미디어) 디지털미디어 분야 성장 단계별 전주기 교육(진로탐색 → 성장 → 취·창업)을 통해 맞춤형 인재 양성 ○ (1인미디어) 전문제작시설·입주공간 등 특화 인프라 지원 및 창작자 육성, 제작 지원, 투자유치, 해외진출 등 통합적 지원

2. 교육비 부담 완화

□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^{교육부}

- (현황) 학비 마련이 필요한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여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고, 이자면제 등 대출 상환부담 완화 지원 필요
- (확대) 학자금 대출 금리를 시중금리보다 낮게 유지하고, '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'의 '대학원생' 지원 대상 확대*
 - * (현행) 일반대학원생 및 전문기술석사 → (개선) 특수·전문대학원생
- 다양한 고등교육 이수방식에 대한 지원 요구를 고려하여 '학점은행제' 학습자를 대상으로 '23년부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
- * '22.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.7%로 지원하고, '09년 이전 대출자까지 시행했던 저금리 전환대출을 '10~'12년 대출자(평균 4.8%→2.9%)까지 확대·시행('22.7~)
- (계획) 2학기 대출금리 저금리(1.7%) 동결 및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('22년) → ICL 대학원생 지원범위 확대 및 학점은행제 학습자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시행('23년~) → 저금리 기조 유지 등 학자금대출 지원 지속('24~'25년)

□ 국가장학금 지속 지원^{교육부}

- (현황)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'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' 지원
- (지속)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, 경제적 취약계층 및 다자녀 지속 지원
 - * (기초·차상위) 연 700만원~전액, (1~3구간) 연 520만원 지원
 - **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에 대해 등록금 전액 지원 및 첫째·둘째 자녀에게 연간 450만원~전액 지원
- (계획) 2022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원('22년) → 2023년 학자금 지원 기본계획 수립('23년)

□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지원^{과학기술부}

- (현황) 이공계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
- (지속) 우수학생에게 연구 몰입환경을 제공하고 이공계 분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지속 지원*
 - * 지원 규모 : 연간 8,500여명 수준

청년의 든든한 미래 지원, 소외됨 없는 청년 복지

- ◇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원활한 자립기반 확보
- ◇ 취약 청년 도약 지원 및 청년층 생활·문화 맞춤 지원

1. 사회출발 자산형성 지원

□ 청년도약계좌 출시^{금융위}

- (현황) 코로나19 이후 고용기회 축소,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청년층 자산형성 기회 부족
- (신규)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출시('23년)
 - 본인소득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(만19~34세)의 납입금에 정부가 매칭지원하고, 이자소득 등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
 - * 청년도약계좌 세부 시행사항은 '23년 예산 확정 후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발표 예정
- (계획) 예산확정·금융권 협의 후 청년도약계좌 출시·운영('23년중)

□ 병사 자산형성 지원(병사월급 205만원 보장)^{국방부}

- (현황)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사회적 보상을 통하여 군 제대 이후 사회진출을 위한 목돈 마련 지원
- (확대) 병 봉급 인상(병장 기준 67.6→100만원),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매칭비율 상향하여 전역시 최대 1,290 수령(본인 750+정부 540만원)
- (계획)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(내일준비지원금)을 결합하여 단계적으로 월 200만원 수준 지원

* 병 봉급(병장 기준) : '22년: 67.6만원 → '23년: 100만원 → '24년: 125만원 → '25년: 150만원

* 자산형성프로그램 : '22년: 14만원 → '23년: 30만원 → '24년: 40만원 → '25년: 55만원

□ 청년층 금융교육 내실화를 통한 금융역량 강화^{금융위}

- (현황) 금융교육기관(금감원, 서금원 등)은 개별적으로 청년층 금융교육 및 홍보 추진중이며, 대학강좌·정책상품 등과 연계한 교육 중심
- (신규) 교육기관 공동으로 사회초년생 등 일반청년 대상 콘텐츠를 개발*하고, 금융교육 종합포털(유튜브채널) 개설하여 홍보 강화**
- * 청년층에게 유익한 금융정보 및 금융제도를 안내하고, 실생활과 연계된 자산관리, 투자위험관리, 실용금융 등으로 콘텐츠의 내용을 구성
- ** 1~3분 내외 숏폼(Short-form), 마이크로러닝(Micro-learning) 콘텐츠 업로드하여 청년층에 흥미 유발하고, 금감원 등이 운영중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심화학습 유도
- (계획) 청년 금융교육 콘텐츠 제작·홍보채널 개설('23년)

□ 청년·대학생 저금리 소액대출(햇살론유스) 공급 확대^{금융위}

- (현황)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대학생·청년에게 저금리로 생계자금을 지원중이나 금리상승 등으로 정책수요 증가
- * ▲(대상) 청년·대학생 등 ▲(대출한도) 최대 1,200만원 ▲(금리) 3.6~4.5%
- (확대) '22년 자금 공급목표를 기존 0.2조원 → 0.3조원으로 확대
- (계획) '22년 중 총 3,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소액대출 공급 예정

□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 (청년내일저축계좌)^{복지부}

- (현황) 저소득 청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대상(기준중위소득 50% → 100%)을 확대한 '청년내일저축 계좌' 시행('22.7월~)
- (지속) '23년도 사업 지속 및 사업 시행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보완
- * 저소득 청년이 매월 10만원 저축시 정부지원금(10만~30만)을 매칭 지원하여, 3년 만기 시 최대 1,440만원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
- (계획) 제도 도입('22.7월) 이후 안정적인 사업 운영 추진

2. 취약 청년 도약 지원

□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지원 확대^{복지부}

- (현황)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자립수당 지원(月 35만원*, 5년), 사후관리 등을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
 - * 「재차 비상경제민생회의」(22.7.8.)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자립수당 인상(月 30만원→35만원 '22.8월~)
- (확대) 자립수당을 추가 인상(月 40만원 '23~)하고,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전담인력 확충 및 사례관리 대상자 확대 지원*
 -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대상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신설(+0.8만명), 자조모임 활성화(120명) 및 보호연장아동 지원** 신설 등 정서적 지원 강화
 - * 전담기관 : ('22년) 사례관리 1,470명, 자립지원전담인력 120명 배치, 7,735백만원
→ ('23년) 사례관리 2,000명, 자립지원전담인력 180명, 12,898백만원
 - ** 별도사유 없이 보호연장이 가능해짐(18→24세, '22.6)에 따라 자립준비전담기관에서 보호연장아동에 대한 사전 자립준비 컨설팅 등 서비스 신규제공(+0.1만명)
- (계획) 사후관리 강화 등을 위한 시·도 자립지원전담기관 기능·역할 확대, 자립지원 실태조사 실시

□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구축^{복지부}

- (현황) 미래 준비 시기에 가족 부양 부담으로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청년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기반은 부재한 상황
- (신규) 초기진입창구 담당 인력 교육·홍보 통한 발굴·연계 활성화, 심층 연구 조사 통한 가족돌봄청년 발굴 및 지원 사업모형(안) 개발
- (계획) 기존 제도 연계('22년) → 초기진입창구 발굴·연계 활성화 및 지원 사업 모형 개발('23년) → 지원 사업 모형 도입 검토('24년~)

□ 고립·은둔 청년 지원체계 구축^{복지부}

- (현황) 다양한 원인(학교부적응, 가정불화, 미취업 등)으로 고립·은둔 청년 발생,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* 가중 우려되나 국가 지원체계 부재
 - * 25세 청년이 평생 은둔 시 15억원 사회비용(각종 급여비, 조세 손실액 등) 발생 추정(보사연, 2022)

- (신규) 고립·은둔 청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계적·실효적인 고립·은둔 청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근거 기반 마련
- (계획) 사업모형 개발('22년) →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모형 개발('23년~)

□ 장애대학(원)생 고등교육 접근성 강화^{교육부}

- (현황)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장애대학(원)생의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지원중이나,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필요
 - ※ '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'을 통해 교육지원인력, 보조기기, 원격 프로그램 등 제공 지원
- (확대)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 확대 및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센터 설치 또는 지정 추진을 통해 지원 체계 정비
 - ※ 거점대학 역할 확대 : 진로취업 지원 중심 → 진로·취업 포함한 고등교육 단계 전체(보조기기, 인력지원, 교육자료 제작 등) 지원, ('22년) 8교, 400백만원 → ('23년) 10교, 650백만원
- (계획)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운영('23~), 장애학생 지원 거점 대학 운영 확대('23~)

□ 청년층 심리·정서 지원 (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)^{복지부}

- (현황)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, 고용불안 등으로 청년층의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해 '22년 전국 청년 대상 심리·정서 지원*
 - *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15,000명을 대상으로 3개월(10회기)간 1:1 맞춤형 전문심리 상담 등 제공 (우선지원 :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,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자)
- (지속)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지속 운영*을 통한 청년의 심리·정서 문제 예방 및 회복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 역할 촉진
 - * 지원규모: ('22년) 15,000명, 5,670백만원 → ('23년) 15,000명, 5,670백만원
- (계획)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제공인력에 대한 '청년 정신건강 특성 및 지원방안' 이러닝 콘텐츠* 개발·운영('22.8월~)
 - * 청년 마음건강 특성 이해, MZ세대 특성에 기반한 상담 및 지원방안을 포함한 교육을 통해 청년당사자 관점으로 접근 가능(4차시, 2시간)

3. 청년층 생활·문화 맞춤 지원

□ 저소득층 청년 문화권 보장 강화^{문체부}

- (현황) 저소득층(기초·차상위) 청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누리카드 지원 강화 필요
 - * (연간 지원금) ('17) 6 → ('18) 7 → ('19) 8 → ('20) 9 → ('21) 10만원
- (확대) 문화 생활 확대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 상향('22년 11만원, 단계적 확대)
 - * (지원규모) '22년 : 2,025억원(263만명×11만원×70%(보조율)) → '23년 : 2,056억원(267만명×11만원×70%(보조율))
- (계획)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를 통한 청년 문화권 보장 지속 추진

□ 청년층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^{여가부}

- (현황) 비혼 증가 등으로 최근 혼자 사는 청년 1인 가구 증가세 → 일상생활 기능 향상 및 사회참여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필요
- (지속) 가족센터를 통해 자기돌봄 관계기술과 소통·교류모임 등 맞춤 프로그램 제공하는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* 지속
 - * ('22년) 606백만원(12개소) → ('23년, 정부안) 613백만원(12개소×105.6백만원×30~50%)
 - ※ 예산은 청년, 중장년, 노년층 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
- (계획) 1인가구 비율을 고려한 지자체별 단계적 확대 추진
 - * ('23년) '22년 시범사업 가족센터 12개소(서울 1개소, 지방 11개소) 운영 계속

□ 청년 예술인 창·제작 활동 지원^{문체부}

- (현황) 청춘마이크, 창작준비금 지원 등 통해 청년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창작활동을 지원중이나,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지원 유지 필요
- (유지) 청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열정과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문화분야 전반에 걸친 창·제작 활동 지원 지속

분야	주요 내용
청춘마이크	○ 청년문화예술인에게 「문화가 있는 날」에 공연 기회(무대.장비 등) 및 공연사례비 지원 * ('22년) 7,250백만원, 503팀 1,534명 → ('23년) 6,700백만원, 500팀 1,500명 * 청년예술가 지원비 : 1,500명x2.5백만원 = 3,750만원 * 공연 운영비, 관리, 홍보 등 2,950백만원
창작준비금	○ 예술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저소득, 취약계층(원로 및 장애) 예술인 및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* (예술인) 18,000명 대상, 300만원 지원(중위소득 120%이하, 격년) * (신진예술인) 3,000명 대상 200만원 지원(중위소득 120%이하, 생애1회) * 지원규모 : ('22년) 600억원(18,000명x3백만원+3,000명x2백만원) → ('23년) 660억원(20,000명x3백만원+3,000명x2백만원)
우수작가지원	○ 「예비 전속작가제 지원」을 받는 작가 중 우수작가를 선정하여 기획전 개최 등 유망작가 프로모션 지원('22~) * 매해 평가를 통해 25% 내외의 우수작가 선정 * 지원규모 : ('22년) 17명, 500백만원 → ('23년) 22명, 500백만원

□ 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를 통한 청년층 이동권 보장^{국토부}

- (현황) 교통비 절감 효과가 우수하고 청년층의 참여율이 높은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전국 17개 시도 163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*
 - * '22.10월 기준 전체 이용자는 약 46만명, 청년 이용자는 약 30만명(65%)
 - *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정류장까지 보행·자전거로 이동한 경우, 마일리지와 카드할인을 통해 대중교통비 최대 30%('21년 이용자 월평균 14,172원) 절감
- (확대) 알뜰교통카드 참여 지자체 및 이용자를 지속 확대*하고, 취약계층에 청년층을 신설**하여 추가 마일리지 지급 등 청년 지원 강화
 - * (확대) ('22년) 50만명(16,440백만원) → ('23년) 64만명(28,957백만원, 청년비중 약 65%)
 - ** (취약계층) (기존) 저소득층(250+100원) ⇨ (개선) 청년층(250+100원), 저소득층(250+250원)
- (계획) 알뜰교통카드 사업 지속 확대
 - * 청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마련('22.12월)

□ 청년층 맞춤형 데이터 지원 강화^{과기정통부}

- (현황) 19~2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사이트 데이터 이용료 면제, 데이터 추가제공 등 데이터 프로모션 진행 ('21.12~'22.5월)
- (확대) 청년층 통신비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이통사와 협의하여 청년들의 교육·취업에 필수적인 데이터 이용혜택 강화 프로모션 추진
- (계획) 이동통신사 협의를 거쳐 '22.9월부터 시행 중

* (SKT) 청년 대상 데이터 리필쿠폰 제공(리필되는 데이터량은 요금제별 상이)
(KT, LGU+) 청년 신청자 대상 월별 데이터 2GB 추가제공
(공통) 워크넷·직업훈련포털 등 구직사이트 데이터 이용료 면제

5 참여 분야

청년이 만드는 청년정책, 청년으로 활기찬 지역

- ◇ 청년이 참여하고 주체가 되는 청년정책
- ◇ 청년이 만들어가는 지역 공동체

1. 청년 정책과정 참여확대

□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설치·운영^{국조실}

- (현황) 부처별로 정책 과정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한 통로가 부재하거나 실효성이 낮아 개선 필요
- (신규) 국정 전반에 청년 인식반영 통로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보좌역*을 배치하고 2030자문단** 설치·운영

* 부처 정책에 대한 청년 인식과 다양한 요구를 장관에게 수시 전달(별정직 5~7급)

** 주요 정책 수립과정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(20명 내외, 청년보좌역이 자문단장 겸임)

- (계획)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원 공개모집('22.10월) → 9개 부처* 시범운영 후 성과를 감안하여 전 부처 확대 검토('23년)

* 청년정책 전담조직이 설치된 기재·교육·행안·문체·복지·고용·국토·중기부, 금융위

□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확대^{국조실}

- (현황)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지정요건*과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 자격요건**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청년의 원활한 국정 참여 한계

* 청년은 상대적으로 사회활동 경험이 부족하나 위원 위촉요건은 엄격 → 청년 위촉 어려움

- (개선) 청년참여 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상향하고, 위원회 지정요건 및 청년 위원 자격요건 완화(「청년기본법」 개정, '22.下)

* 현재 정부참여위원회 청년 평균 비율 22% 수준을 30% 수준(~'25년)으로 확대

** (現) 「청년기본법」상 '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'로 규정 → (改) 외교·안보 등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외는 원칙적으로 청년참여 위원회로 규정

- (계획) 청년기본법 개정('22.下) →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추가지정

□ 청년인재DB 플랫폼 구축·운영^{국조실}

- (현황) 청년들은 정책과정에 참여하고자 하고, 부처·지자체는 그 목소리를 듣고자 하나, 이를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단 부재
- (신규) 청년인재가 직접 등록하고, 부처·지자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년인재풀을 구축하여 청년들의 정책참여를 지원
 - * 정부위원회, 정책자문, 정책평가 등 청년이 희망하는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
 - * 예산규모: ('22년) DB구축, 291백만원 → ('23년) DB활용 및 유지보수, 118백만원
- (계획) 청년인재DB 플랫폼 구축 및 운영('22.12월~)

2. 지역공동체 청년 참여 확대

□ 청년마을 지원 확대^{행안부}

- (현황) 청년 주도의 사업 기획·실행을 통해 청년 지역정착을 돕는 「청년마을」 조성사업 추진 중
 - * 청년들은 지역 유휴공간을 주거, 커뮤니티, 창업 등의 공간으로 바꾸고,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지역특산물, 전통산업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훌륭한 창업 아이템으로 재탄생
(‘18년도 시범사업 시작(‘18~’20년, 3개소) → ‘22년: 12개소 선정)
- (확대) 지역자원을 활용한 로컬 브랜딩을 통해 ‘청년마을’ 조성 확대
(매년 12개소), 청년 지속 유입·정착을 위한 연차별 지원(2.5억×3년)^{*}
 - * ‘23년 선정된 12개소(1년차) 및 ‘22년 선정된 12개소(2년차) 지원
 - ** 지원규모 : ('22년) 3,000백만원(12개소×2.5억) → ('23년) 6,000백만원(24개소×2.5억)
- (계획) 청년마을별 맞춤형 컨설팅 강화를 통한 청년마을 지속 가능성 확보('22년~)

□ 청년마을기업 운영 확대^{행안부}

- (현황) 마을기업에 젊고 유능한 청년자원을 보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마을기업* 발굴·육성 지원
 - * 최대 3회, 총 1억원 사업비 지급 및 경영컨설팅, 판로,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
- (확대) 청년마을기업을 기존 대비 10% 추가 지정*하고, 마을기업 선정단계부터 지역개발사업 등 관련 사업 연계 시 우대**
 - * ('22년) 29개 기업 지원(1회차 18개, 2회차 7개, 3회차 4개), 국비 595백만원
→ ('23년) 29개 + 10% 추가 지정 목표, 국비 655백만원
 - ** 청년마을기업 선정 시 지역개발사업 등 관련 사업을 연계할 경우 가점 부여
- (계획) 「마을기업법」 제정('23년) → 청년마을기업 DB화('24년) → 미래형 모델 발굴·판로 개척 지원('22~'26년)

□ 청년두레 지원^{문체부}

- (현황) 지역청년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관광자원 기반의 관광 관련 사업체(청년두레)를 발굴·육성*하여 지역청년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
 - * 주민사업체(3인이상이면서 구성원 2/3이상이 청년(만39세 이하)) 발굴 및 창업·경영개선 지원(최장 5년, 최대 1.1억 원)
- (지속) 「청년두레」 지속을 통한 지역 청년의 창업 및 자립·발전 지원
 - * 지원규모 : ('22년) 12,581백만원 중 일부 → ('23년) 11,951백만원 중 일부 (정부안)
- (계획) 청년 주민사업체(청년두레) 신규 발굴 및 지원 지속(연중)

IV. 정책기반 구축과제

1 공정 기회 확산

청년이 체감하는 공정 문화기회 조성

◇ 청년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 및 도약기회 보장

1. 공정채용문화 확산

□ 공정채용 기반 강화^{고용부}

- (현황) 절차상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「채용절차법*」을 운영 중이나,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을 더욱 강화할 필요

*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- (개선) 현행 「채용절차법」을 「^{가칭}공정채용법」으로 전면 개정하여 부정채용금지 등 채용의 실질적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('23년)
 - 청년이 공감하는 「공정채용 가이드북」 발간, 기업 맞춤형 공정채용 컨설팅, 공정채용 우수사례발굴·확산 등 공정채용 문화 확산
- (계획) 공정채용법안 마련 및 공정채용 가이드북 발간('22년) → 입법추진·공정채용 문화 확산('23년~)

□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^{권익위}

- (현황) 공공부문 채용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채용비리 근절 및 공정채용 문화 정착 필요

* 권익위에 설치한 '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(한시기구)'의 운영기한이 '22.12월 만료, 정부차원의 공정채용 관리감독 지속 필요

- (확대) '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(상설조직)'를 설치하여 관리 대상기관 확대* 및 '공공부문 공정채용 표준지침' 마련 등 공정채용 관리 활동 강화

* (현행) 중앙·지자체 공공기관, 기타공직유관단체 등 1,352개 기관(임직원 채용) → (확대)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지방의회 등 549개 기관(비공무원 채용) 추가

- (계획)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을 통해 실태조사 및 공정채용 관리 강화('23년~)

□ 국가 자격시험 공정성 강화^{권익위}

- (현황) 취업난 가중·미래의 경제적 우려 등으로 2030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큰 폭으로 증가

- 최근 일부 자격시험에서 일반응시자(비공무원 수험생) 차별논란* 등 개선요구 확산

* 특정 직종 공무원 응시자에게만 면제된 특정 시험과목이 높은 난이도로 출제되면서, 청년 수험생에게 불공정했다 등 공정성 논란 발생

- (개선) 주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운영실태를 조사·분석하여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모니터링 등 추진

* 내용: 주요 시험별 불합리한 시험·과목면제 자격 개선 등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권고

- (계획) 제도개선 권고('22년) → 관련 입법 추진('23년~) → 소관 부처별 국가자격시험제도 운영('24년~)

2. 공정도약 기회보장

□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^{법무부}

- (현황) 미성년자가 현행법상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권한을 제때 행사하지 못하여 부모의 빚을 대물림받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*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관련 민법 규정 정비 필요

*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에도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 (「민법」 제1019조 제1항, 제1026조 제2호)

- (개선) 민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른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(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)
 - *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채무 자체는 상속인에게 전부 승계되지만, 한정승인을 한 이후부터 상속인의 변제 책임이 상속재산 범위 내로 제한됨(「민법」 제1028조)
- 미성년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빚을 대물림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
 - * (개정안) 미성년자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할 수 있음(「민법」 제1019조 제4항)
- (계획) 법률안 국회 제출('22. 8.) 및 국회 통과 노력

□ 채무조정 강화를 통한 청년 재기지원^{금융위}

- (현황) 고실업·고물가·고금리 위기 속 저신용 청년층의 이자상환 부담 및 불법 사금융 노출 위험 가중
- (신규) 저신용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·재기를 위해 선제적 이자율 감면*, 원금 상환유예** 등 청년특례프로그램 신설
 - * 채무과중도(소득, 재산 감안)에 따라 저신용 청년 대출이자 감면(30~50%)
 - **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(0~3년) 저신용 청년 이자율 3.25% 적용(기존 최대 15%)
- (계획) 청년 특례 프로그램 운영('22.9월~'23.9월)

□ 청년 구직활동 걸림돌 제거를 위한 법령 정비^{법제처}

- (현황) 청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법령 개선 필요
- (개선) ①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선취업 후진학하는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취업 또는 자격 취득 시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 확대,
 - ②성년 이후 영업 개시가 가능한 경우에도 해당영업에 필요한 자격취득은 성년 이전에도 응시 허용 개선
- (계획)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법령 일괄정비 완료('22년) → 자격 시험 응시연령 법령정비 추진('23년~) → 청년 구직활동 걸림돌 제거 등 추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('24~25년)

2 추진체계 구축

청년에 특화된 정책 추진체계 구축

◇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**종합적 지원체계** 확립

1. 통합지원 체계 확립

□ 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^{국조실}

- (현황) 청년정책의 전달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청년의 인지도·체감도 저하 → 통합적 정보제공을 통한 정책 효과 제고 필요
* 現 전국 194개 청년센터 운영(지자체 자율), 청년정책 정보안내·활동공간 제공 등 수행
- (신규) 청년정책 정보·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고 지역 청년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오프라인 '청년 통합지원체계' 구축
- (계획) 지역 청년지원센터 지정·지원, 중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「청년기본법」 개정 추진('22년 하반기)

□ 온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^{국조실}

- (현황) 부처별·지자체별로 운영하는 플랫폼에 청년정책이 산재되어, 탐색 비용이 증가하고 정책정보 확인·지원 기능을 분절적으로 제공
* 現 주거(국토부 '마이홈'), 교육(교육부 '한국장학재단') 및 복지부·중기부 등 정책별 중앙부처 플랫폼, 서울·경기 등 지자체별 플랫폼에서 청년정책을 부분적으로 안내
- (신규) 온라인 종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사이트별 청년정책 정보를 연계하여 실시간 정보제공 및 개인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지원
* 청년 개개인이 청년정책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검색, 자격 확인 및 신청처리까지 가능한 시스템 탑재 추진
** 지원규모('23년) : 온라인청년센터 운영 예산 3,775백만원
- (계획)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및 온라인 종합플랫폼 구축 착수('23년~)
→ 온라인 종합플랫폼 구축·운영('24년~)

2. 정책기반 보강

□ 청년특화 전담 연구기관 설치 검토^{국조실}

- (현황) 근거기반 정책 뒷받침할 청년특화 전담 연구기관 부재
- (신규) 근거기반 청년정책 및 전문적 연구를 위해 전담 연구기관 설치 검토
 - * 기능: ▲ 청년정책 분야간 융합적 연구, ▲ 정책·사업 및 예산 분석·평가, ▲ 조사·통계 실시·관리, ▲ 청년관련 미래의제 개발연구 등
- (계획) 타당성 검토('22~), 관계법령 개정 추진*
 - * 타당성 검토결과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추진방안 마련

□ 청년문제 대응 재원조성 방안 강구^{국조실}

- (현황) 청년문제는 예측하기 어렵고 종합적·능동적·탄력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나 신생정책으로서 정책적 지원이 미흡
- (신규) 안정적 정책 추진을 통한 청년 권익보장 및 청년문제에의 탄력적 대응을 위한 재원조성방안 수립 검토
 - * 용도 예시 : 취약청년 실태파악 및 원인진단 프로그램 발굴·지원, 건전한 청년 금융 생활 지원, 제도권밖·학교밖 청년 지원사업 등
- (계획) 연구용역('23년)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「청년기본법」 개정 추진

□ 데이터기반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「청년통계등록부」 구축^{통계청}

- (현황) 일자리, 주거 등 청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역·성별·혼인·취약계층 등을 입체적으로 고려한 핀셋형 정책 필요
 - 그러나 경제활동, 직업훈련, 수급 등 주요 데이터가 부처별로 산재, 분절된 반면, 종합적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 연계 기반은 미흡
- (신규) 다양한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우리나라 19~34세 모든 청년의 통계적 속성 항목을 시계열로 수록한 모집단(「청년통계등록부」) 구축

《※ 청년통계등록부 항목》

- [일자리] 취업 및 창·폐업, 종사상지위(상시·일용·자영업), 근속기간, 업종, 직업훈련 등
- [가구·양육] 가구구성(1인, 한부모 등), 혼인·출산, 맞벌이, 육아휴직 등
- [기 타] 거주형태, 주택소유, 1년 전 거주지, 다문화 등

- (계획) 청년통계등록부 구축 완료 및 대외서비스 운영 ('22.12월~)

V. 향후 추진계획

1 정책과제 이행·보완 및 홍보 강화

- 법령 개정, 제도 개선 등 소관 부처별 정책과제를 철저히 이행
- 다양한 온-오프라인 매체(청년의 날, 온라인청년센터, 청년친화적 SNS 등)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및 부처별 자체 홍보 추진

2 '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반영 및 사후관리

- 각 정책과제는 23년 예산 및 세부 추진사항 보완하여 '23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계획 이행점검(반기별) 및 평가로 철저히 관리
-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시행계획 평가를 통한 청년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으로 정책과제의 실질적 개선 유도

3 정책수요 및 신규과제 지속 발굴

- 청년보좌역·2030 자문단, 청년공론화장 운영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속 수렴하여 새로운 정책수요 발굴 및 정책과제 마련
- 청년정책조정위원회·청년정책 전담조직 협의회·지자체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지속 점검 및 관리